

통일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남북 접경지대의 지역경제 영향을 중심으로 -

정은찬

목 차

| | |
|---------------------------|---------------|
| I. 서론 | III. 분석모형 |
| II. 통일경제특구 조성계획 및 대상지역 현황 | IV. 자료 및 분석결과 |
| | V. 결론 및 정책제언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남북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최근 남북관계가 활로를 찾고,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의 조성은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침체된 국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요인이다.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전에 구체적 분석결과가 필요하며 남북경제협력 관련 정책 담당자들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행 통일경제특구 조성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경의축, 경원축 벨트가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강원도에도 별도의 특구가 조성될 것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산업 및 물류벨트가, 강원도에는 관광특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산업별로 산업과 금액 구성을 달리하였을 때 지역경제파급효

과를 다지역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는 예상되는 조성 벨트별로 경의축, 경원축, 강원축에 대해 별도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경의축은 산업별 예산 배분 비중에 따라, 경원축은 인천과 경기지역의 예산배분 비중에 따라 시나리오를 세분화 하였다. 분석결과 동일금액의 수요 증가 시 경제적 파급효과의 크기가 경의축, 강원축, 경원축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지역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과 경원축의 경우 인천과 경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편중되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효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남북 접경지역, 남북경제협력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¹⁾과 연관된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접경지역별로 분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었다.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완공된 2005년 말~ 2006년 초에 17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100여명이 공동으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4건, 19대 국회에서 6건이 발의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임기만료 및 폐기되는 등 입법에 실패하였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2016년 5월에 발의된 6개의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활로를 찾고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과 맞물려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서의 통일경제특구 조성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전제로 남북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되는 추세다.

통일경제특구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남북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경기, 인천 및 강원권에 집중되어 조성되므로 지역경제는 물론 나아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투자 감소로 둔화된 국내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남북관계에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통일경제특구도 경기도와 강원도의 남북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자계획으로 경기, 인천 및 강원권에 그 영향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남북 접경지역 중 어느 지역에 집중되느냐에 따른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이 필요하며, 지역별 구성을 어떻게 하여야 국내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경우 산업 및 물류벨트 조성을, 강원도의 경우 관광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지역별·산업별로 산업과 금액구성을 달리하였을 때 지역경제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지역 산업연관분석방법을 통해 실시하려고 한다. 즉, 통일경제특구 설립 시 접경지역별 경제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며, 이는 국내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1)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은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3대 경제벨트(환동해권, 환서해권, 접경지역) 구축을 통해 우리의 경제영역을 대륙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려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p.20.)

2. 연구방법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접경지역별 경제효과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지역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지역 산업연관분석 방법은 국내경제 전체 산업연관표를 지역으로 확장한 분석방법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방법이다. 본 분석방법은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제과급효과 분석에 널리 활용된다. 다지역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본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통일경제특구 조성계획이 지역별 산업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지역 산업연관분석은 최종 수요 한 단위 증가 시 생산과 부가가치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별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통일경제특구와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이 실시되면 해당 지역의 민간수요, 투자, 정부지출 등 최종수요가 늘어나 산업의 중간재 생산을 증가시켜 지역경제전반에 과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통일경제특구 사업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대상지역에 최적화 된 투자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근지역과의 이출입은 대상지역에 실시되는 정부사업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어 줄 수 있어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지역산업구조를 고려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통일경제특구 조성방안



출처: 이외희(2018)

현재 구상 중인 통일경제특구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경의축과 경원축, 그리고 경기권과 강원권 접경지역 관광특구로 구성된다.²⁾ 다만 현재

2) 출처: 이외희,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조성방향은?", 이슈&진단 336, 경기연구원, 2018

정부의 구체적인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예산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의축과 경원축, 그리고 강원권 특구 조성 시 경제적 효과를 각각 분석하고, 분석단위는 동일한 금액 투입 시 나타나는 유발효과의 크기로 설정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통일경제특구 관련 시나리오는 파주, 고양 등을 주축으로 하는 경의축 산업벨트 조성, 인천과 연천, 철원 등을 축으로 하는 경원축 물류 및 관광벨트 조성 및 속초, 고성 등에서 금강산을 잇는 강원권 관광특구 조성의 세 가지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각 개발계획 내에서 다양한 산업들이 연관될 수 있어 여러 산업들에 투자비율을 달리 적용할 때를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대상지역 및 국가 전반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생산파급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등 산업연관분석에서 관찰 가능한 유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지역인 경기, 인천, 강원권에 미치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타 지역에 미치는 간접적 파급효과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각 지역별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면 세부계획 수립 시 각 지역별 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국가경제전반에 더 발전적인 방향의 세부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존문헌 분석

통일경제특구 조성 관련 기존문헌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남북접경지대 개발 전략 또는 효과분석 관련 문헌들이 주를 이룬다. 남성욱(2005)은 통일경제특구 개발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통일경제특구의 문제점으로 북한의 특구 참여 여부 불투명성과 막대한 예산소요, 국내 법·제도 미비 및 외국계 자본의 참여가 미온적인 점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소요예산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사례를 들어 개성공단의 조성비용이 1단계 조성비용과 2단계 조성비용을 합하면 약 1조 2,000억원이 소요되었던 것을 보아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구의 성급한 조성보다는 4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해외 자본 유입과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김동성·강식(2011)은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강대국들과 서구 선진국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메가리전(Global Mega-Region)’을 건설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DMZ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며, 접경지역의 핵심거점인 강화, 김포, 파주, 개성 및 개풍을 중심으로 국제산업단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요사업안으로는 국제산업단지 건설, 서해 5도 및 해주 개발, 서해공동어로구역 설치, 한강하구 및 임진강의 남북한 공동 활용, 외국인 타운 건설, DMZ평화생태공원 조성, 의료휴양지구 설치 및 청도에서 출발해 대련, 신의주, 인천, 군산, 목포, 가코시마를 잇는 서해안의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협력체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효과로 국제적 접근을 통한 접경지역 개발과 한반도 평화·안보 유지,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남북통합의 기반 마련, 한반도 글로벌 메가리전(Global Mega-Region) 건설을 위한 출발 및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의 지역발전의 부응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주리·조은설(2011)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현황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강원도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합한 사업의 선정, 공동협력 및 개방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 공동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간 공동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기 위해 농업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농산물 시장 기반 조성, 동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운영, LNG 기지를 골자로 하는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환동해권 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강유역 공유하천분야 협력, DMZ의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 등의 환경분야 계획과 인적자원 육성, 문화교류와 같은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조응래 외 4인(2012)은 DMZ·접경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DMZ·접경지역 간 소통을 위해 생태·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과 산업 및 물류를 연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접경지역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세종-서울-평양의 대도시권 구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상 아래 DMZ·접경지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통일경제특구는 파주는 산업형, 연천, 철원은 산업/관광 혼합형, 고성, 설악권은 관광/생태형 특구로 개발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특구 추진 시 1단계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2단계로 경제자유지역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소민(2013)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접경지역 연계 개발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개성공단은 임금조건이나 토지, 세제상의 혜택 등에서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해도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실질소득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해 남북 모두에게 상생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추진방안으로는 서울-인천-개성을 포괄하는 삼각주 연계개발 및 해주까지 포함된 광역해상 경제특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추진될 경우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삼각경제지대를 형성하여 산업 간의 분업체계를 통한 연계개발의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용환 외 6인(2015)은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과 경제적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통일경제특구가 접경지역에 추진되면 안보·군사적 긴장완화 효과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경제과급효과 분석을 위해 통일경제특구가 경기도 지역에 100만평 또는 30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것을 가정하였고, 2013년 경기도에서 구상한 장단면 거곡리 일원 통일경제특구 조성비를 참조하여 1평당 특구 조성비를 30만원으로 설정한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00만평 조성 시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약 6,06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455억원, 취업유발효과 약 3,958명의 경제과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고, 입주기업 매출액 4조 4,877억원 증가 시 약 8조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와 3조원이 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6만명 이상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동엽(2016)은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경기접경지역 발전방안과 경제과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통일경제특구의 성격을 ‘안보경제복합형특구’의 형태로 정의하고 새로운 특구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도 김포 및 파주 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일을 대비한 통일완충지대를 마련이 필요하고, 한반도의 지형학적 측면을 고려하고 배후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였을 때, 경기서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여 통일한반도의 미래부담을 중간지대에서 일정부분 경감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 반월시화산업단지에 김포-파주산업단지와 파주LCD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총 세 곳의 산업단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구 100만평 조성 시 입주기업 생산액은 2조 6,621억원, 전국적 생산유발효과는 5조 9,69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조 2,394억원, 취업유발효과는 4만 5,364명으로 나타났다. 특구 300만평 조성 시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은 6조 3,889억원, 전국적 생산유발효과는 14조 4,84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조 7,08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1만 1,937명으로 분석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는 이해정 외 3인(2018)의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통일경제특구’ 구상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통한 외자유치 노력과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통일경제특구’ 구상을 연계한다면 남북경협 재개는 물론, 新 경협 모델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연계하여 축적된 기존 경협의 경험을 활용하는 한편, 새로운 남북 협력모델을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남북 모두의 정책을 고려해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축과 서해축의 통일경제특구 실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대외개방전략 간 이해가 합치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경협 재개를 고려해야 하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대외개방정책을 견인하기 위한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의희(2018)은 통일경제특구의 경기도 조성방안에 대해 최근 남북화해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경의

축과 경원축의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타당성이 주장되었다. 경의축은 국제기구, 학술교류 및 국제교역, 개성공단 연계사업 및 첨단산업, 관광, 주거 기능을, 경원축은 국제평화생태 및 관광, 물류, 에너지 및 육종 산업, 주거 등의 기능 분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면밀한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연구를 요약하면 크게 통일경제특구의 형태와 정책적 제언 관련 연구와,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나뉜다. 다만 경제파급효과 연구들은 최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의 일환인 환서해안 벨트와 환동해안 벨트를 중심축으로 하는 경의축, 경원축 및 강원권의 통일경제특구의 형태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경기지역에 특구를 조성하는 시나리오의 효과만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경원축과 경의축의 특구 조성을 구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찰하고, 강원권에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경우도 분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화하였다.

II. 통일경제특구 조성계획 및 대상지역 현황

본 장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일경제특구 조성계획 현황을 살펴보고, 대상 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 환경을 고찰하여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었을 때 해당지역에 어떠한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일경제특구 조성계획 현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들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4.27, 5.26, 9.18)이 이루어지고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면서 남북관계는 활로를 찾았다. 이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설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2016년 5월을 기점으로 발의된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올해 들어 통일부는 이를 통합한 통합법률(안)을 제시하였다³⁾. 주요 내용은 남측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것으로, 남측에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특구를 조성하여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데 의의를 두었다. 이러한 계획은 북한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와 수도권 중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와 강원권 접경지역의 경제개발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3) 통일경제특구는 2006년 2월 17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100여명이 공동으로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8대 국회에서도 4건 발의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어 임기만료 및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6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에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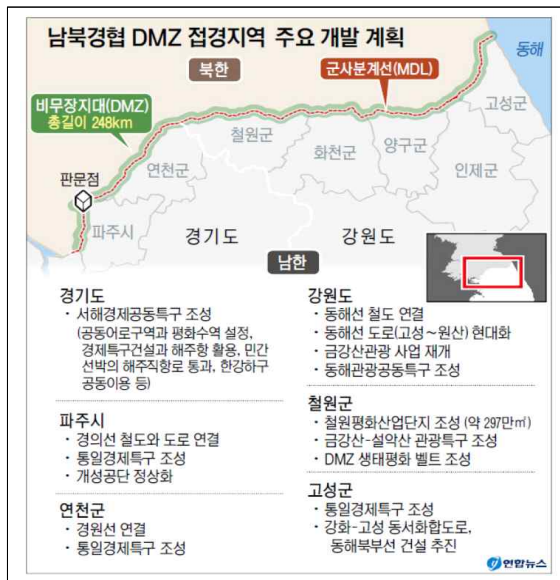
<그림 2> 한반도 신경제 구상4)



<그림 3> 통일경제특구 후보지5)



<그림 4> 남북 접경지역 개발계획6)



<그림 5> 인천시 통일경제특구 구상7)



전술하였듯이 이외희(2018)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통일경제특구 조성계획을 경의축과 경원축의 두 축으로 규정하여 산업부문과 관광·물류 부문에서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의축에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종들과 경기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특구를

4)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5) 출처: Dailynews, '통일특구,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2018.8.6.
 6) 출처: 경기일보, "남북경협 DMZ 접경지역 주요 개발계획", 2018.9.20.
 7) 출처: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2010 주요 군정계획' 중 개성과 연계한 남북경제연결벨트 구상

조성할 계획 하에, 기계, 장비, 전자전기 등의 중공업과 종이, 목재 및 인쇄출판 등의 경공업 및 사업지원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기술서비스 등의 전문 서비스업 등이 포함하였다. 경원축의 경우는 관광특구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관광업, 농축산물가공, 농축산 R&D, 에너지 산업 등 북한과의 관광 및 에너지 산업협력이 가능한 업종에 집중한 계획을 보여주었다. 경의축과 경원축에서 예상되는 주요 업종은 <그림 6>, <그림 7>과 같다.⁸⁾

<그림 6> 경의축 통일경제특구의 예상 업종 <그림 7> 경원축 통일경제특구의 예상 업종



출처: 이의희(2018)

강원권 통일경제특구의 경우 설악산·금강산·원산을 잇는 남북관광교류의 거점 조성 및 북한 동부 지하자원과 동해 수산자원을 활용한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그림 8> 고성군 통일경제특구 구상⁹⁾ <그림 9> 철원군 통일경제특구 구상¹⁰⁾



육동한·김범수(2018)는 강원도가 2008년부터 철원에 개성공단의 역개념인 산업

8) 출처: 이의희,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조성방향은?”, 이슈&진단 336, 경기연구원, 2018./산업일보, “통일경제특구, 경의축, 경원축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추진”, 2018.9.4.

9) 출처: 고성군청, 통일관광특구 중장기 종합발전 구상

10) 출처: 강원도청, 철원평화시 통일경제특구 건설 구상

단지 조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고, 고성은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하는 통일관광경제특구로의 지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철원은 노동집약적 가공조립보다는 4차 산업 개념이 접목된 분야를 도입하고, 고성은 남북공동시장, 무비자왕래, 북방문화교류센터 등 장기적으로 관광, 금융, 식품산업의 국제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강원권 통일경제특구개발은 대체로 관광특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다.

현재 통일부에서 제시한 「통일경제특구법」 통합 법률안에서는, 통일부장관이 10년 이상의 통일경제특구기본계획을 매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때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통일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법률은 통일경제특구 구상에 대한 일반론을 규정한 법안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도출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2. 통일경제특구 대상지역 현황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법률과 통일부의 단일안 모두 통일경제특구의 대상지역으로 남북한 접경지역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 접경지역은 모두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으로, 경기도의 경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이 해당되며, 강원도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 해당된다. 접경지역의 인접지역으로는 경기도는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가,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와 속초시가 해당되며, 경기도의 인접지역으로 인천광역시도 접경지역과의 물류경제의 요충지 역할이 가능한 지역이다.



출처: 통일경제특구법안 설명자료, 대한민국 국회, 2018

현재 경기도의 파주시와 고양시는 다수의 산업단지가 포진해 있어 산업특구로

서의 기능을 담당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철원군과 포천시, 양주시 등은 DMZ를 통한 생태관광특구로의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또한 강원도는 고성군과 속초시의 경우 설악산 관광특구가 있어 관광지역으로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남북한 접경지역 현황은 위의 <그림 10>과 같고, 접경지역별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률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상지역은 아래의 <표 1>과 같다.¹¹⁾

<표 1> 법률(안) 별 통일경제특구 예상 지역

| 구분 | A안 | B안 | C안 | D안 |
|--------------|--|---|---|--|
| 대상지역 개요 | <통일경제과주 특별자치시> 파주시 관할 구역 | <인접지역> 비무장지대 남방한 계선 이남의 시·도 및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 (민간인 통제선 이 북의 지역 포함)으 로서,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 <접경지역> 접경지원법상의 접경지역 정의와 동일 | <북한 인접지역> 비무장지대 남방한 계선 이남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 군의 관할구역에 속 하는 지역 |
| 대상지역 시도구분 | 경기도 : 파주시 | 인천 : 강화군 경기도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 인천 : 강화군 경기도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 구분 | E안 | F안 | 정부조정안 | |
| 대상지역 개요 | <북한 인접지역> 비무장지대 남방한 계선 이남의 지역으 로서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강원도 고성 군 일대의 지역 | <북한 인접지역> 비무장지대 남방한 계선 이남의 시·군 의 관할구역에 속하 는 지역으로서 북한 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 <북한 인접지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남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 |
| 대상지역 시도구분 | 강원도 : 고성군 | 인천 : 강화군 경기도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인천 : 강화군 경기도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

출처: 통일경제특구법안 설명자료, 대한민국 국회, 2018

11) 출처: 통일경제특구법안 설명자료, 대한민국 국회, 2018

Ⅲ. 분석모형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도출에 활용될 다지역 산업연관분석 모형과 경의 축과 경원축의 인천·경기 일대 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강원권을 중심으로 한 통일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1. 다지역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1) 산업연관분석 개요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간의 중간재, 최종재로 연결된 연관관계를 통해 산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 간 연결구조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정량연구방법이다. 산업연관표는 산업의 투입과 지출의 균형을 선형의 행렬구조로 나타낸 표이다. 산업연관표의 세로 방향은 산업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투입과 요소투입을, 가로 방향은 산업의 생산물의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의 수요를 나타낸다.

산업연관효과는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생산, 부가가치, 수입, 고용 등 경제지표의 변화를 말한다. 산업연관표를 통해 도출가능한 산업연관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등이 있다¹²⁾.

생산유발계수는 투입계수로부터 도출되는데, 각 산업부문에서 해당 부문의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및 연료 등의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을 투입계수(input coefficients) 또는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s)라 한다. 투입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최종수요와 총산출 수준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데,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궁극적으로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총산출 규모는 최종수요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동 재화 및 서비스 이외에 해당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투입재의 생산이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투입계수에 따라 연속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투입계수를 매개로 최종수요에 의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생산의 크기를 생산유발효과라고 하고 이를 계측, 분석하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의 기본원리다.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보면,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에서 수입을 차감하면 총산출액과 일치하므로 다음과 같은 수급방정식을 만들

12) 생산유발효과란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른 경제주체의 생산 증가 효과를 말하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산업연관표 상 부가가치의 증대 효과를 말한다. 수입유발효과와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역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수입과 취업자 수 및 고용자 수의 변화를 말한다. 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발계수행렬이 도출되어야 한다.

수 있으며, 수급방정식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a_{11}X_1 + a_{12}X_2 + \dots + a_{1n}X_n + Y_1 &= X_1 \\
 &\vdots \\
 a_{i1}X_1 + a_{i2}X_2 + \dots + a_{in}X_n + Y_i &= X_i \\
 &\vdots \\
 a_{n1}X_1 + a_{n2}X_2 + \dots + a_{nn}X_n + Y_n &= X_n
 \end{aligned}
 \tag{식 1}$$

단 a_{ij} : 투입계수, X_i : i부문의 산출액, Y_i : i부문의 최종수요

위 식을 행렬을 이용해 나타내면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X + Y = X \tag{식 2}$$

단, A는 투입계수행렬, X는 총산출액벡터, Y는 최종수요벡터.

(식 2)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X = (I - A)^{-1}Y \tag{식 3}$$

단, I는 단위행렬

(식 3)에서 $(I - A)^{-1}$ 로 나타나는 계수가 생산유발계수이며, 이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낸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중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부가가치를 총 생산으로 나눈 행렬을 부가가치계수 행렬이라 하고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widehat{A}^v = V/X \tag{식 4}$$

단, V는 부가가치행렬

부가가치계수행렬이 정의되면 생산유발계수 행렬에 곱하여 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을 (식 5)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v = \widehat{A}^v(I - A)^{-1} \tag{식 5}$$

수입유발효과는 수입에 대한 수급방정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데, 수입에 대

한 수급방정식은 (식 2)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m X + Y^m = X \quad (\text{식 6})$$

단, A^m 는 수입품 투입계수행렬, Y^m 는 수입품 최종수요벡터

국산거래와 수입거래를 구분한다면 국산거래에 대한 수급방정식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식 7)에서 도출된 (식 8)을 (식 6)에 대입하면 국내거래와 수입거래를 통합한 수급방정식을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d X + Y^d = X \quad (\text{식 7})$$

단, A^d 는 국내제품 투입계수행렬, Y^d 는 국내제품 최종수요벡터

$$X = (I - A^d)^{-1} Y^d \quad (\text{식 8})$$

$$A^m (I - A^d) Y^d + Y^m = X \quad (\text{식 9})$$

(식 9)에서 $A^m (I - A^d)$ 는 국내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 시 수입의 증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수입유발계수로 정의할 수 있다.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부가가치유발계수와 마찬가지로 취업계수 또는 고용계수를 생산유발계수와 곱하여 산출하며,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l = \hat{L} (I - A^d)^{-1} \quad (\text{식 10})$$

단, \hat{L} 은 취업 또는 고용계수행렬

최종수요는 (식 11)과 같이 민간수요와 정부수요로 구분하며, 본 연구는 정부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Y^d = Y_h^d + Y_g^d, \quad Y^m = Y_h^m + Y_g^m, \quad Y = Y^d + Y^m \quad (\text{식 11})$$

단, Y_h : 민간부문 최종수요, Y_g : 정부부문 최종수요

(2) 다지역 산업연관분석

다지역 산업연관분석 방법은 전술한 국가 산업연관표를 다지역으로 구분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한다. 지역 산업연관표는 경쟁형과 비경쟁형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역 산업연관표는 비경쟁형으로 각 지역의 산업별 생산액과 투입액이 모두 산업연관표에 표시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k지역에 대한 r지역과 s지역의 산업별 투입액이 모두 산업연관표에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이를 모두 포괄한 중간투입행렬이 정의된다. 그리고 해당 중간투입행렬을 최종 생산액으로 나누면 지역 투입계수행렬(A)이 정의된다. 비경쟁 지역 산업연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¹³⁾

<표 2> 비경쟁 지역 산업연관표 구성

| | | 중간수요 | | | | | | | | | 최종수요 | | | 수입 (공제) | 산출액 |
|----------|-----|------|---|---|-----|---|---|-----|---|---|------|---|---|------------|-----|
| | | k지역 | | | r지역 | | | s지역 | | | k | r | s | | |
| | | 1 | 2 | 3 | 1 | 2 | 3 | 1 | 2 | 3 | | | | | |
| 중간 투입 | k지역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r지역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s지역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수입투입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부가 가치 | k지역 | | | | | | | | | | | | | | |
| | r지역 | | | | | | | | | | | | | | |
| | s지역 | | | | | | | | | | | | | | |
| 산출액 | | | | | | | | | | | | | | | |

출처: 이우기(2005)

이를 수식을 통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두 지역 모형을 가정한다면 총생산과 최종수요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begin{bmatrix} X_1 \\ X_2 \end{bmatrix} = \begin{bmatrix} Z_{11} & Z_{12} \\ Z_{21} & Z_{22} \end{bmatrix} + \begin{bmatrix} Y_1 \\ Y_2 \end{bmatrix} = \begin{bmatrix} A_{11} & A_{12} \\ A_{21} & A_{22} \end{bmatrix} \begin{bmatrix} X_1 \\ X_2 \end{bmatrix} + \begin{bmatrix} Y_1 \\ Y_2 \end{bmatrix} \quad (\text{식 12})$$

(식 12)를 통해 다음과 같이 최종수요와 생산 간의 관계가 성립한다.

13) 이우기, “우리나라의 실측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법 연구”, Quarterly National Account, 한국은행, 2005.

$$\begin{bmatrix} X_1 \\ X_2 \end{bmatrix} = \left(\begin{bmatrix} I_n & 0 \\ 0 & I_n \end{bmatrix} - \begin{bmatrix} A_{11} & A_{12} \\ A_{21} & A_{22} \end{bmatrix} \right)^{-1} \times \begin{bmatrix} Y_1 \\ Y_2 \end{bmatrix} \quad (\text{식 13})$$

두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 산업연관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left(\begin{bmatrix} I_n & 0 \\ 0 & I_n \end{bmatrix} - \begin{bmatrix} A_{11} & A_{12} \\ A_{21} & A_{22} \end{bmatrix} \right)^{-1} = \begin{bmatrix} I_n - A_{11} & -A_{12} \\ -A_{21} & I_n - A_{22} \end{bmatrix}^{-1} = \begin{bmatrix} B_{11} & B_{12} \\ B_{21} & B_{22} \end{bmatrix} \quad (\text{식 14})$$

$$\text{where } B_{11} = (I_n - A_{11})^{-1} + (I_n - A_{11})^{-1} A_{12} B_{21}$$

$$B_{12} = (I_n - A_{11})^{-1} A_{12} B_{22}$$

$$B_{21} = (I_n - A_{22})^{-1} A_{21} B_{11}$$

$$B_{22} = (I_n - A_{22})^{-1} + (I_n - A_{22})^{-1} A_{21} B_{12}$$

(식 14)에서 B_{11} 은 지역 1의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가 지역 1의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생산유발효과를 의미하며 B_{12} 는 지역 2의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 시 지역 1에 미치는 직·간접적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동일한 원리로 B_{21} 은 지역 1의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 시 지역 2에 미치는 직·간접적 생산유발효과를, B_{22} 는 지역 2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 시 지역 2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생산유발계수 앞부분에 각각의 계수행렬을 곱해준 형태로 표현된다. 각각의 효과는 (식 15) - (식 17)과 같다.

$$\begin{bmatrix} V_1 \\ V_2 \end{bmatrix} = \begin{bmatrix} A_1^v & 0 \\ 0 & A_2^v \end{bmatrix} \begin{bmatrix} B_{11} & B_{12} \\ B_{21} & B_{22} \end{bmatrix} \begin{bmatrix} Y_1 \\ Y_2 \end{bmatrix} \quad (\text{식 15})$$

$$\begin{bmatrix} M_1 \\ M_2 \end{bmatrix} = \begin{bmatrix} A_1^m & 0 \\ 0 & A_2^m \end{bmatrix} \begin{bmatrix} B_{11} & B_{12} \\ B_{21} & B_{22} \end{bmatrix} \begin{bmatrix} Y_1 \\ Y_2 \end{bmatrix} \quad (\text{식 16})$$

$$\begin{bmatrix} L_1 \\ L_2 \end{bmatrix} = \begin{bmatrix} A_1^l & 0 \\ 0 & A_2^l \end{bmatrix} \begin{bmatrix} B_{11} & B_{12} \\ B_{21} & B_{22} \end{bmatrix} \begin{bmatrix} Y_1 \\ Y_2 \end{bmatrix} \quad (\text{식 17})$$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16개 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다. 따라서 (식 14) - (식 17)의 식들을 16개 지역으로 확장한 모형을 통해 통일경제특구가 남한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한다.

2.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효과 분석시나리오

통일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의축과 경원축의 인천·경기일대 개발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개발의 경제파급효과를 각각 살펴보았다. 즉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별도로 수행된다고 했을 때, 경제파급효과가 얼마인지 분석한 것으로 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 1 : 경의축 산업벨트 조성
→ 파주, 고양지역의 주요 산업들의 최종수요 증가 시 산업연관효과
- 시나리오 2 : 경원축 물류 및 관광벨트 조성
→ 인천지역과 경기지역의 물류 및 관광수요 증가 시 산업연관효과
- 시나리오 3 : 강원권 관광특구 조성
→ 강원지역의 관광수요 증가 시 산업연관효과

시나리오 1의 경우 파주, 고양 등 경기서북부 권역과 개성을 연결하는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을 제조업과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나리오 2는 강화, 인천북부의 한강하구를 철원, 연천 등 경기중북부 권역과 연결하는 물류 및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말한다. 시나리오 3은 강원북부권역을 금강산 관광에 특화된 지역으로 개발하는 관광특구 조성 계획을 말한다. 해당 시나리오 별로 지역 및 산업이 달리 연관될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계획이 가져오는 경제파급효과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각 계획에 동일한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나타나게 될 경제효과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시 적정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나리오 1은 산업벨트 내 어떠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결정할 때, 지역 내 산업구조를 고려하는데서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시나리오 1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여러 산업에 배분하는 세부 시나리오를 설정함으로써 통일경제특구 계획 조성 시 나타나게 될 실질적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자료 및 분석결과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2013년 지역 투입산출표와 고용표를 활용하였다. 2013년 지역 산업연관표는 2010년 실측표를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연관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에서는 통합대분류 30개, 통합중분류 82개로 산업이 분류된 지역 산업연관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대분류 상의 30개 분류를 기준으로 산업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분류는 <표 3>과 같다.

<표 3> 산업분류표

| 코드 | 산업명 | 코드 | 산업명 |
|-----|-------------|-----|-------------------|
| 001 | 농림어업 | 016 | 전력, 가스 및 증기업 |
| 002 | 광업 | 017 |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업 |
| 003 | 음식료품 및 담배 | 018 | 건설업 |
| 004 | 섬유 및 가죽제품 | 019 | 도매 및 소매업 |
| 005 | 목재, 종이, 인쇄 | 020 | 운수업 |
| 006 | 석탄 및 석유제품 | 021 | 음식점 및 숙박업 |
| 007 | 화학제품 제조업 | 022 | 정보통신 및 방송업 |
| 008 | 비금속광물제품 | 023 | 금융 및 보험업 |
| 009 | 1차 금속제품 제조업 | 024 | 부동산 및 임대업 |
| 010 | 금속제품 제조업 | 025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011 |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26 | 사업지원서비스업 |
| 012 | 전기 및 전자기기 | 027 | 공공행정 및 국방 |
| 013 | 정밀기기 제조업 | 028 | 교육서비스업 |
| 014 | 운송장비 제조업 | 029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 015 | 기타 제조업 | 030 |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

출처: 2014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다만 관광산업의 경우 현재 산업연관표 분류에 따로 산업이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강욱·박자연(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산업연관표 상에서의 관광산업분류를 이용하여 관광산업 최종지출 증가 시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관광산업의 명칭과 지역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분류 매칭표는 다음과 같다.¹⁴⁾

14) 이강욱·박자연,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기본연구보고서

<표 4> 지역산업연관표 상의 관광산업 분류

| 관광산업 명칭 | 168부문 분류 (2005년 실측표 기준) | 30부문 분류 (2010년 실측표 기준) |
|-------------|----------------------------|---------------------------|
| 도소매 | 129. 도소매 | 19. 도매 및 소매업 |
| 식음료 | 130. 음식점 | 21. 음식점 및 숙박업 |
| 숙박 | 131. 숙박 | 21. 음식점 및 숙박업 |
| 여객운송 | 132. 철도운송 | 20. 운송서비스업 |
| | 133. 도로운송 | |
| | 135. 수상운동 | |
| | 136. 항공운송 | |
| 운수보조 | 137. 운수보조서비스 | 20. 운송서비스업 |
| 차량임대업 | 154. 기타사업서비스 | 26. 사업지원서비스업 |
| 문화예술공연 | 161. 문화서비스 | 30.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
| 운동경기 및 오락유흥 | 162. 오락서비스 | 30.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

출처: 이강욱·박자연(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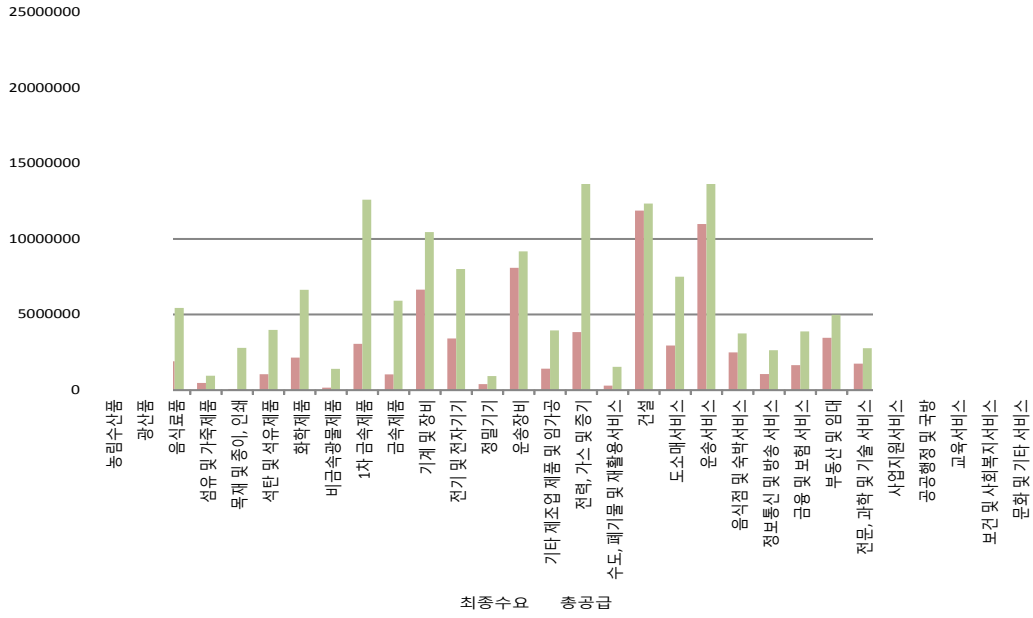
분석 대상지역인 인천, 경기도 및 강원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공급은 운송서비스, 전력, 건설, 1차 금속제품 공급과 건설, 운송서비스, 건설, 운송장비, 기계 산업의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자 및 전기, 운송장비, 화학제품, 도소매 공급과 전자 및 전기, 건설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도는 건설, 음식료품, 공공행정 및 국방, 도소매, 음식료 및 숙박의 공급과 건설, 공공행정 및 국방의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지역에는 첨단산업과 제조업 벨트가 조성될 경우 그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지역은 운송서비스의 공급이 높아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 도소매와 음식료 및 숙박 공급이 높아 관광지로 조성할 경우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경기도, 강원도의 산업별 생산 및 지출구조는 <그림 11> - <그림 13>과 같다.¹⁵⁾

2009-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15) 출처: 2014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그림 11> 인천광역시 산업별 생산 및 지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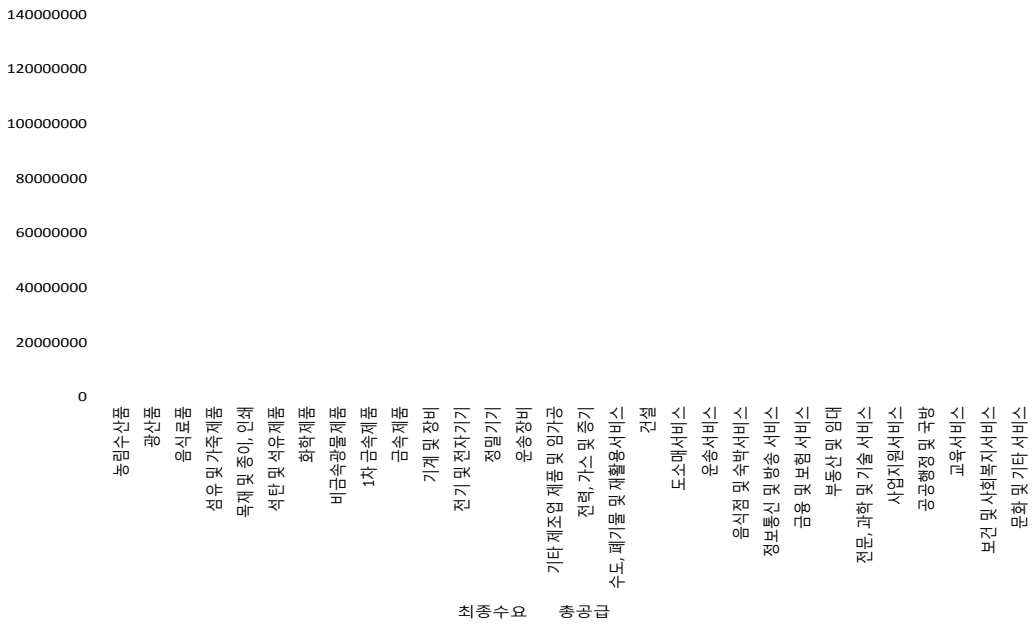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출처: 2014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그림 12> 경기도 산업별 생산 및 지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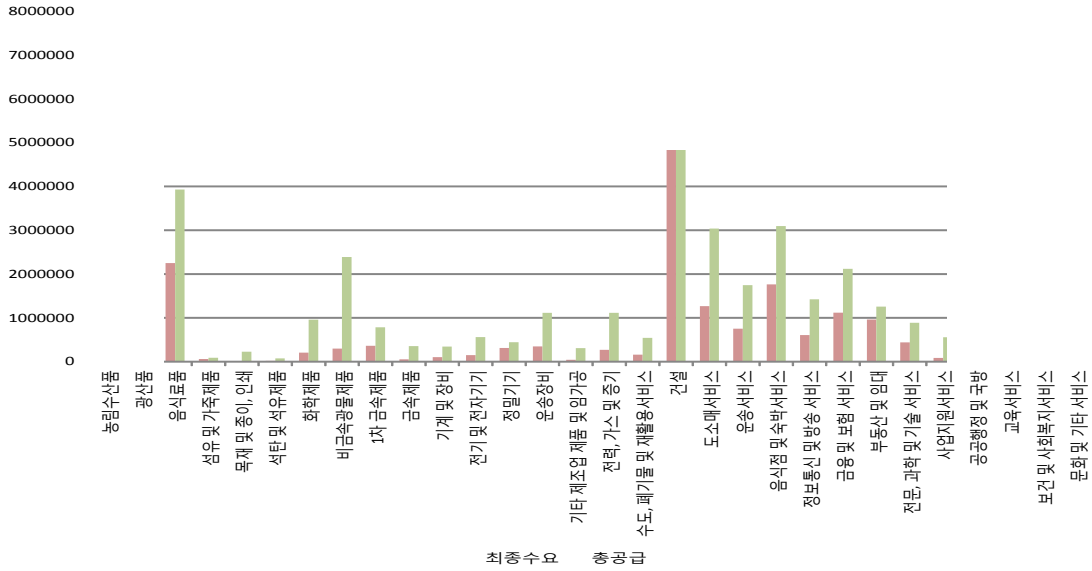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출처: 2014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그림 13> 강원도 산업별 생산 및 지출 구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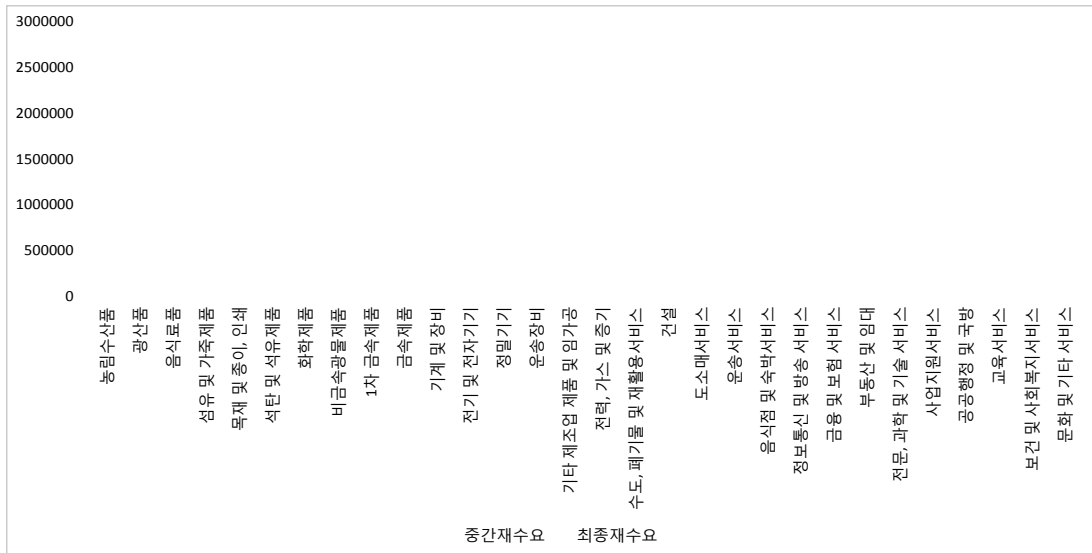


출처: 2014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인천과 경기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인천에서 경기로 지출되는 중간재는 음식료품,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등 제조업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못지않게 도소매서비스와 운송서비스 등의 서비스업 지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종재의 경우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계, 도소매, 전문과학기술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경기로의 중간재 및 최종재 지출구조는 <그림 14>와 같다¹⁶⁾.

<그림 14> 인천→경기 중간재 및 최종재 지출 구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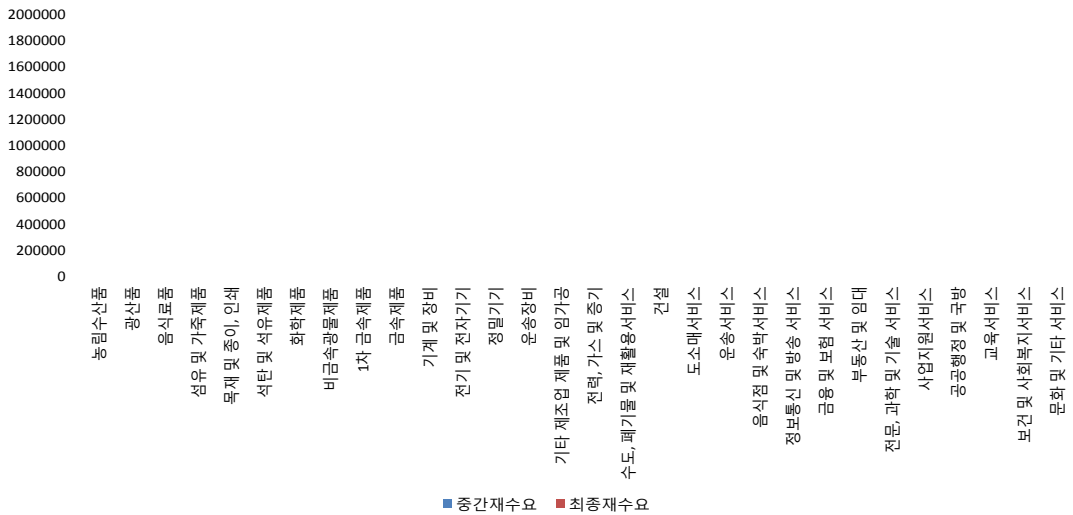


출처: 2014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16) 출처: 2014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경기에서 인천으로의 지출구조를 보면 중간재의 경우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전자 및 전기, 운송장비 등 제조업 중간재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도소매서비스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재의 경우 음식료품 최종재 지출이 경기에서 인천으로의 거래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도소매, 음식숙박,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서비스업 지출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에서 인천으로의 중간재 및 최종재 지출 구조는 <그림 15>와 같다.¹⁷⁾

<그림 15> 경기→인천 중간재 및 최종재 지출 구조 단위: 백만원



출처: 2014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그림 14>와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와 인천 사이의 거래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경기에서 인천으로의 지출에 서비스업 지출 규모가 인천에서 경기로의 지출 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에서 생산된 제조업 제품들이 인천으로 유입되고 인천 내에서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큰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경기를 산업단지로, 인천을 물류단지로 설립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 시키는데서 관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기지역의 제조업 중간재 제품들의 상당량이 인천을 통해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의축 뿐만 아니라 경원축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의 크기가 상당할 것도 예상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산업연관표 상의 지출구조를 통한 분석은 현황을 파악 하는 데는 적절하나, 실제로 지역 산업 수요 증가 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가 어떠한지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와 인천의 주요 산업들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때, 그리고 강원지역의 관광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경제파급효과를 다지역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시할 것이다.

17) 출처: 2014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 통일경제특구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1) 경의축 특구 조성 시 경제파급효과

경의축 특구 조성 시나리오는 경기도의 주력 산업인 전자 및 전기, 운송장비, 기계, 화학제품 등의 제조업 최종 수요 증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분석의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1,000억원을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사용하고, 해당 금액이 모두 최종수요로 연결된다는 가정 하에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¹⁸⁾ 또한 경의축 특구 조성에 따른 효과 분석 시 40%를 전자 및 전기에 활용하고, 운송장비, 기계, 화학제품에 각각 20%를 할애하는 시나리오와, 각 산업에 동일하게 25%씩의 자금을 할애하는 경우를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최종수요 증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표 5> 경의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나리오

| Scenario 1-1 | | Scenario 1-2 | |
|--------------|---------|--------------|---------|
| 산업 | 최종수요 증가 | 산업 | 최종수요 증가 |
| 전자 및 전기 | 400억원 | 전자 및 전기 | 250억원 |
| 운송장비 | 200억원 | 운송장비 | 250억원 |
| 기계 | 200억원 | 기계 | 250억원 |
| 화학제품 | 200억원 | 화학제품 | 250억원 |

분석결과 최종수요 1,000억원 증가 시 국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시나리오 1의 경우 약 2,116억원의 생산파급효과, 1,252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약 1,87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시나리오 2의 경우 약 2,17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302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99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에는 국가 전체 생산유발효과의 약 60%와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약 40% 수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시나리오 1의 경우 약 1,32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3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75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시나리오 2의 경우 약 1,3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549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806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자 및 전기 산업 중심의 특구조정보다는 여러 제조업들이 고루 분포되도록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6>과

18) 분석의 편의를 위해 경의축, 경원축, 강원축 조성비용을 모두 1,000억원으로 통일하였으며, 이는 2018년 10월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남북교류협력 지원 기금의 약 6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석에 타당한 수치로 판단된다.

같다.

<표 6> 정의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경제파급효과

단위: 억원, 명, %

| | 생산유발효과 (억원) | | 부가가치유발효과 (억원) | | 취업유발효과 (명) | |
|-----------|-----------------|-----------------|------------------|-----------------|-----------------|-----------------|
| | Scenario 1-1 | Scenario 1-2 | Scenario 1-1 | Scenario 1-2 | Scenario 1-1 | Scenario 1-2 |
| 파급효과 합계 | 2116.02 | 2177.96 | 1251.96 | 1302.10 | 1879 | 1999 |
| 투입대비 비율 | 2.12 | 2.18 | 1.25 | 1.30 | - | - |
| 서울 | 140.63 | 147.69 | 207.69 | 218.57 | 381 | 402 |
| 인천 | 66.41 | 71.64 | 58.85 | 63.22 | 84 | 90 |
| 경기 | 1329.32 | 1350.28 | 535.82 | 548.96 | 752 | 806 |
| 화학제품 | 244.24 | 299.33 | 81.87 | 98.08 | 96 | 114 |
| 기계 및 장비 | 229.80 | 284.86 | 72.93 | 89.40 | 101 | 124 |
| 전기 및 전자기기 | 448.66 | 290.49 | 142.68 | 96.62 | 93 | 63 |
| 운송장비 | 231.07 | 288.62 | 58.59 | 73.04 | 60 | 75 |
| 대전 | 10.79 | 11.31 | 12.72 | 13.36 | 30 | 32 |
| 충북 | 37.89 | 38.26 | 31.24 | 31.75 | 51 | 53 |
| 충남 | 98.24 | 104.75 | 68.33 | 71.82 | 75 | 80 |
| 광주 | 17.09 | 18.09 | 17.48 | 18.50 | 34 | 37 |
| 전북 | 18.85 | 20.42 | 17.58 | 18.85 | 41 | 44 |
| 전남 | 87.17 | 98.09 | 52.66 | 58.25 | 50 | 54 |
| 대구 | 18.79 | 20.04 | 23.08 | 24.18 | 54 | 57 |
| 경북 | 132.26 | 122.27 | 87.63 | 83.25 | 94 | 94 |
| 부산 | 28.99 | 31.16 | 36.78 | 39.35 | 78 | 83 |
| 울산 | 59.25 | 65.22 | 35.03 | 38.32 | 27 | 29 |
| 경남 | 60.88 | 68.73 | 53.06 | 58.94 | 83 | 91 |
| 강원 | 7.28 | 7.71 | 10.37 | 10.92 | 32 | 34 |
| 제주 | 2.19 | 2.30 | 3.64 | 3.86 | 11 | 12 |
| 수도권 | 1536.35 | 1569.61 | 802.36 | 830.75 | 1217 | 1298 |
| 충청권 | 146.92 | 154.32 | 112.28 | 116.92 | 156 | 166 |
| 전라제주권 | 125.30 | 138.89 | 91.36 | 99.46 | 137 | 147 |
| 경북권 | 151.06 | 142.31 | 110.71 | 107.44 | 149 | 151 |
| 경남권 | 149.12 | 165.11 | 124.87 | 136.61 | 188 | 203 |
| 강원권 | 7.28 | 7.71 | 10.37 | 10.92 | 32 | 34 |
| 서울비중 | 6.65% | 6.78% | 16.59% | 16.79% | 20.30% | 20.09% |
| 인천비중 | 3.14% | 3.29% | 4.70% | 4.86% | 4.49% | 4.51% |
| 경기비중 | 62.82% | 62.00% | 42.80% | 42.16% | 40.02% | 40.34% |
| 강원비중 | 0.34% | 0.35% | 0.83% | 0.84% | 1.71% | 1.70% |
| 충청권비중 | 6.94% | 7.09% | 8.97% | 8.98% | 8.29% | 8.28% |
| 전라제주권비중 | 5.92% | 6.38% | 7.30% | 7.64% | 7.27% | 7.35% |
| 경북권비중 | 7.14% | 6.53% | 8.84% | 8.25% | 7.91% | 7.55% |
| 경남권비중 | 7.05% | 7.58% | 9.97% | 10.49% | 10.01% | 10.16% |

(2) 경원축 특구 조성 시 경제파급효과

경원축 특구 조성 시나리오는 인천과 경기지역 예산 투입비율을 6:4로 하는 경우와 4:6으로 하는 경우를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천의 경우 물류서비스를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경기도는 DMZ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서비스를 주력으로 특구를 조성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인천의 경우 운송서비스에서만 최종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물류서비스와 관광으로 인한 운송서비스의 수요 증분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운송서비스가 전체 수요의 50%를 차지하고 관광산업과 관련된 나머지 산업 즉 도소매, 음식숙박, 사업지원서비스 및 문화서비스에 동일한 비중의 수요 증분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나리오는 <표 7>과 같다.

<표 7> 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나리오

| Scenario 2-1 | | | | Scenario 2-2 | | | |
|--------------|---------|----------|---------|--------------|---------|----------|---------|
| 인천 | | 경기 | | 인천 | | 경기 | |
| 산업 | 최종수요 증가 | 산업 | 최종수요 증가 | 산업 | 최종수요 증가 | 산업 | 최종수요 증가 |
| 운송 서비스 | 600억원 | 운송 서비스 | 200억원 | 운송 서비스 | 400억원 | 운송 서비스 | 300억원 |
| | | 도소매 | 50억원 | | | 도소매 | 75억원 |
| | | 음식숙박 | 50억원 | | | 음식숙박 | 75억원 |
| | | 사업지원 서비스 | 50억원 | | | 사업지원 서비스 | 75억원 |
| | | 문화 서비스 | 50억원 | | | 문화 서비스 | 75억원 |

분석결과 최종수요 1,000억원 증가 시 국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시나리오 1의 경우 약 1,649억원의 생산파급효과, 964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약 2,04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시나리오 2의 경우 약 1,71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07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52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1과 2의 파급효과를 경기와 인천을 놓고 비교해보면 생산유발효과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1의 경우 전체 파급효과에서 인천이 약 43%, 경기도가 약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인천이 약 28%, 경기도가 약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지역에 많은 금액의 예산을 투입할수록 해당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천지역에 많은 금액을 투입했을 때 보다 경기지역에 많은 금액을 투입했을 때 총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경제과급효과

단위: 억원, 명, %

| | 생산유발효과 (억원) | | 부가가치유발효과 (억원) | | 취업유발효과 (명) | |
|---------|-----------------|-----------------|------------------|-----------------|-----------------|-----------------|
| | Scenario 2-1 | Scenario 2-2 | Scenario 2-1 | Scenario 2-2 | Scenario 2-1 | Scenario 2-2 |
| 과급효과 합계 | 1649.05 | 1716.24 | 964.47 | 1075.06 | 2041 | 2529 |
| 투입대비 비율 | 1.65 | 1.72 | 0.96 | 1.08 | - | - |
| 서울 | 116.40 | 135.13 | 163.15 | 189.13 | 301 | 353 |
| 인천 | 711.11 | 489.16 | 276.27 | 197.63 | 334 | 244 |
| 운송서비스 | 623.14 | 419.29 | 214.38 | 146.25 | 211 | 144 |
| 경기 | 550.81 | 799.54 | 327.82 | 462.79 | 1009 | 1454 |
| 도소매 | 59.67 | 86.77 | 39.63 | 55.42 | 132 | 185 |
| 운송서비스 | 211.56 | 315.82 | 89.30 | 132.16 | 323 | 479 |
| 음식숙박 | 55.88 | 82.63 | 22.98 | 33.30 | 117 | 170 |
| 사업지원서비스 | 57.61 | 86.06 | 43.69 | 64.71 | 167 | 248 |
| 문화서비스 | 57.26 | 85.44 | 30.55 | 45.21 | 127 | 188 |
| 대전 | 5.95 | 6.84 | 6.99 | 8.14 | 17 | 20 |
| 충북 | 13.12 | 16.06 | 12.49 | 15.04 | 28 | 35 |
| 충남 | 42.22 | 51.57 | 28.64 | 35.02 | 51 | 65 |
| 광주 | 6.33 | 7.09 | 7.15 | 8.08 | 17 | 19 |
| 전북 | 9.13 | 11.57 | 9.56 | 11.90 | 30 | 39 |
| 전남 | 51.10 | 49.38 | 23.02 | 25.24 | 37 | 45 |
| 대구 | 7.44 | 8.52 | 9.66 | 11.05 | 26 | 30 |
| 경북 | 24.26 | 28.65 | 23.30 | 27.62 | 47 | 58 |
| 부산 | 13.32 | 14.93 | 17.68 | 19.73 | 41 | 46 |
| 울산 | 54.40 | 51.20 | 17.86 | 18.19 | 16 | 17 |
| 경남 | 35.06 | 35.94 | 29.91 | 31.87 | 52 | 60 |
| 강원 | 5.87 | 7.31 | 7.47 | 9.17 | 25 | 32 |
| 제주 | 2.54 | 3.33 | 3.49 | 4.44 | 10 | 13 |
| 수도권 | 1378.32 | 1423.84 | 767.25 | 849.55 | 1644 | 2051 |
| 충청권 | 61.29 | 74.48 | 48.12 | 58.21 | 96 | 120 |
| 전라제주권 | 69.09 | 71.38 | 43.22 | 49.67 | 94 | 116 |
| 경북권 | 31.70 | 37.17 | 32.96 | 38.68 | 72 | 88 |
| 경남권 | 102.78 | 102.07 | 65.45 | 69.78 | 109 | 123 |
| 강원권 | 5.87 | 7.31 | 7.47 | 9.17 | 25 | 32 |
| 서울비중 | 7.06% | 7.87% | 16.92% | 17.59% | 14.76% | 13.95% |
| 인천비중 | 43.12% | 28.50% | 28.65% | 18.38% | 16.39% | 9.65% |
| 경기비중 | 33.40% | 46.59% | 33.99% | 43.05% | 49.43% | 57.49% |
| 강원비중 | 0.36% | 0.43% | 0.77% | 0.85% | 1.25% | 1.26% |
| 충청권비중 | 3.72% | 4.34% | 4.99% | 5.41% | 4.70% | 4.75% |
| 전라제주권비중 | 4.19% | 4.16% | 4.48% | 4.62% | 4.61% | 4.59% |
| 경북권비중 | 1.92% | 2.17% | 3.42% | 3.60% | 3.53% | 3.46% |
| 경남권비중 | 6.23% | 5.95% | 6.79% | 6.49% | 5.33% | 4.84% |

(3) 강원권 특구 조성 시 경제파급효과

강원권 특구 조성 시나리오는 강원 지역에 총 1,000억원의 관광산업 수요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를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강원권의 통일경제특구는 금강산 관광과 연계한 관광 특구로 관광산업과 관련한 총 5개 산업에 동일한 비율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강원권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나리오는 <표 9>와 같다.

<표 9> 강원권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나리오

| Scenario 3 | |
|------------|---------|
| 산업 | 최종수요 증가 |
| 도소매 | 200억원 |
| 음식숙박 | 200억원 |
| 운송서비스 | 200억원 |
| 사업지원서비스 | 200억원 |
| 문화서비스 | 200억원 |

분석결과 강원권 관광산업 최종수요 1,000억원 증가 시 국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는 약 1,71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289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3,988명으로 나타났다. 강원권의 산업별 효과를 보면, 도소매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20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7억원, 취업유발효과 598명으로 나타났다. 운송서비스는 생산유발효과 21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5억원, 취업유발효과 424명, 음식숙박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20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6억원, 취업유발효과 448명, 사업지원서비스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21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52억원, 취업유발효과 535명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서비스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21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2억원, 취업유발효과 540명으로 나타나 동일금액 투입에 따른 효과가 운송서비스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권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경제파급효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동일금액 투입 시 경의축 개발의 경제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원축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지역의 유발효과가 타 지역 대비 다소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경기권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벨트가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권 관광벨트 조성은 상당히 큰 취업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경제특구 조성 세부 계획 수립 시 경기권역의 산업시설과 강원권역의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추진하면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강원권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경제과급효과

단위: 억원, 명, %

| | 생산유발효과 (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억원) | 취업유발효과 (명) |
|---------|----------------|------------------|---------------|
| 과급효과 합계 | 1712.86 | 1289.19 | 3988 |
| 투입대비 비율 | 1.71 | 1.29 | - |
| 서울 | 131.80 | 190.44 | 331 |
| 인천 | 41.03 | 35.29 | 54 |
| 경기 | 116.35 | 118.04 | 261 |
| 대전 | 11.48 | 12.11 | 29 |
| 충북 | 22.35 | 20.17 | 49 |
| 충남 | 49.25 | 35.21 | 75 |
| 광주 | 6.63 | 7.90 | 20 |
| 전북 | 13.26 | 14.08 | 47 |
| 전남 | 33.82 | 25.32 | 62 |
| 대구 | 10.76 | 13.04 | 35 |
| 경북 | 34.46 | 33.58 | 86 |
| 부산 | 16.64 | 21.45 | 50 |
| 울산 | 28.11 | 14.50 | 15 |
| 경남 | 28.83 | 28.70 | 71 |
| 강원 | 1163.69 | 713.29 | 2786 |
| 도소매 | 206.75 | 126.79 | 598 |
| 운송서비스 | 214.56 | 104.54 | 424 |
| 음식숙박 | 206.61 | 95.65 | 448 |
| 사업지원서비스 | 211.73 | 151.71 | 535 |
| 문화예술서비스 | 210.55 | 122.35 | 540 |
| 제주 | 4.40 | 6.05 | 18 |
| 수도권 | 289.19 | 343.78 | 647 |
| 충청권 | 83.08 | 67.49 | 153 |
| 전라제주권 | 58.11 | 53.36 | 146 |
| 경북권 | 45.21 | 46.62 | 120 |
| 경남권 | 73.58 | 64.66 | 135 |
| 강원권 | 1163.69 | 713.29 | 2786 |
| 서울비중 | 7.70% | 14.77% | 8.31% |
| 인천비중 | 2.40% | 2.74% | 1.36% |
| 경기비중 | 6.79% | 9.16% | 6.55% |
| 강원비중 | 67.94% | 55.33% | 69.88% |
| 충청권비중 | 4.85% | 5.24% | 3.83% |
| 전라제주권비중 | 3.39% | 4.14% | 3.67% |
| 경북권비중 | 2.64% | 3.62% | 3.02% |
| 경남권비중 | 4.30% | 5.02% | 3.38% |

V.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일환인 통일경제특구 조성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경의축과 경원축 및 강원권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해당 시나리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도출하였다. 가상의 시나리오는 각 권역에 동일하게 1,000억원의 최종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였고, 1,000억원의 배분은 경의축의 경우 산업별 배분으로, 경원축의 경우 지역별 배분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경의축을 중심으로 한 경기권역의 산업시설에 수요가 늘어날 때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원축을 중심으로 한 인천의 물류산업과 경기의 관광산업 수요가 늘어날 때 가장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해당 지역의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부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설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행정구역 내에 다양한 산업시설과 물류 및 관광특구 조성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내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천이 물류의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에 큰 비중의 금액이 투입되는 시나리오에서 경제파급효과가 다른 시나리오 대비 작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여건 외에 산업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조성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인천지역과 경기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경원축 특구 시나리오 분석결과 타 시나리오 대비 총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본 연구의 분석이 다지역 분석으로 지역 간 거래특성에 따른 효과가 모형에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인천지역의 물류와 경기지역의 물류, 관광산업의 연계가 반영되었는데 그 효과가 다른 시나리오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경원축 조성 계획 수립 시 인천과 경기지역의 시너지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산업의 조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가 수도권에 편중되게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경제 집중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지역에 비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 서울은 직접투자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통일경제특구 설립에 대해 일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정책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통일경제특구 설립의 최근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특히 기존연구에서는 경기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 대비 투입비용을 중심으로 단순화 된 시나리오를 적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인천과 강원권까지 포함하여 산업구조를 반영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도 새로운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지역별 분석은 특구 조성 대상지역의 산업구조와 특구조성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속에서 남북이 함께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의 정당성과 현실적 실효성을 전파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일환인 통일경제특구 설립의 긍정적 경제파급효과를 실증분석결과로 입증함으로써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비전과 목표, 정당성을 인식시킬 수 있고 청년세대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희망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지역별 분석은 대북경제정책 담당자와 대북 투자기업 대상 교육에서도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구 조성 대상지역의 산업구조와 특구 조성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가 제고됨에 따라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취업유발효과는 통일경제특구가 북한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분석한 결과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와 같은 북한 내 경제특구와의 연결과 북한 노동력의 국내유입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분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법·제도적으로 정비가 구체화되고 예산계획이 확정되어 발표되면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구상’의 일환인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을 연계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끝]

참고문헌

- 김동성·강식, “DMZ 경제특구 구상”, 이슈&진단 23, 경기연구원, 2011.
- 김동성, “통일경제특구를 넘어 한반도 국제협력지대로”, 대한지리학회, 2015.
- 김동성·최용환·손기웅·정성희·김소연, “남북교류협력과 경기도”,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2016.9.
- 남성욱, “통일경제특구 개발전략과 향후 전망”, ‘통일로 가는 길’ 토론회 발표자료, 2005.
- 신동기, “통일경제특구법안의 법리적 검토”, 법학논고 27, 경북대, 2007.12.
- 성경룡,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과제”, 평화학연구 10 권 3호, 2009.
- 육동환·김범수, “2018 광복절 경축사와 통일경제특구”, 정책메모 제705호, 강원연구원
- 이강욱, 박자연,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기본연구보고서 2009-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이동엽, “통일경제특구지정에 따른 경기접경지역 발전방안과 그 경제파급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외희,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조성방향은?”, 이슈&진단 336, 경기연구원, 2018
- 이우기, “우리나라의 실측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법 연구”, Quarterly National Account, 한국은행, 2005.
- 이해정·이용화·김성환·강성현,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통일경제특구’ 구상의 연계 가능성”, 경제주평, 18-34, 현대경제연구원, 2018.
- 정주리·조은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9권 제1호, 2011.
- 조응래·김군수·박은진·최용환·황금희, “DMZ 접경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 이슈 & 진단 60, 경기연구원, 2012
- 정소민, “남북한 접경지역 연계개발 가능성 추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최용환·김군수·김소연·김갑식·신중호·조봉현·이승현, “경기도의 통일경제특별구역 유치방안 및 효과”,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2015.
- 통일부, “2018년 10월 남북협력기금 통계”, 2018.
-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2017.
- 중부일보, “통일경제특구 통한 남북경제통합 준비, 인천의 역할 커진다”, 2018.10.2.
- 아시아경제, “다시 뛰는 개성공단.. 통일경제특구와 연계, 글로벌공단 도약 꿈꾼다”, 2018.9.30.
- 경인일보,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 (1) 파주 통일경제특구 해설”, 2018.8.20.
- 경기일보, “남북경협 DMZ 접경지역 주요 개발 계획”, 2018.9.20.
- 이데일리, “인천시, 2021년 교동 통일경제특구 지정 용역 추진”, 2018.9.20.
- 산업일보, “통일경제특구, 경의축, 경원축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추진”, 2018.9.4.
- 머니투데이, “남북관계+지역경제, 일석이조 노리는 통일경제특구법”, 2019.9.4.
- 연합뉴스, “통일경제특구법 가시권, 통합법안 11월 논의”, 2018.9.17.